

푸코가 ‘중국적 세계질서’를 바라볼 때: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박 홍 서 | 상해사회과학원

- | 목차
- I. 서론: 문제제기와 기존 연구 검토
 - II. 푸코의 계보학과 통치성
 - III.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자율적’ 위계 만들기
 - 1. 중국적 세계질서의 지배 기술: ‘기미책(羈縻策)’
 - 2. 중국적 세계질서의 자아 기술: ‘군자 나라’ 되기
 - V. 결론: 중국적 세계질서의 부활?
- | 주제어 중국적 세계질서, 미셸 푸코, 통치성, 기미책, 군자
The Chinese World Order,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Gimi tactics
(loose reign), Gunja (a man of noble character)

본 논문의 목적은 미셸 푸코가 제시한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통해 ‘중국적 세계질서’를 권력의 통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통치성은 타인에 대한 지배 기술과 행위자 자신의 자아 기술로 구성되어지며, 역사적으로 통치 효율성의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변화되어 왔다. 일례로 현대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행위자의 자유를 극대화해 스스로를 통치하게 함으로써 통치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중국적 세계질서 역시 ‘기미책’이라는 지배 기술과 주변국 스스로를 ‘군자 나라’로 자기 주체화 시키는 자아 기술을 통해 통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권력의 효과로서 작동한다. 이러한 통치 전략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월성을 인정받는 한 그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하고 아울러 그들 스스로 중국적 세계질서의 일원으로서 자기 주체화시킴으로써 효율적 대외통치를 가능케 한다. 중국적 세계질서가 효율적인 통치 전략으로 기능하였다면, 향후 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서도 그 효용성이 재할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 중국이 주장하는 ‘조화세계’ 개념에서 드러나듯, 그 핵심은 ‘자율적’ 국제관계를 구축해 대외적 통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142). 본 논문은 2014년 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수정 보완본임을 밝히며, 본 논문에 건설적인 토론과 논평을 해주신 서정경 박사님과 난토 모임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국제정치학회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도 밖으로 나와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라는 포괄적 관점으로 제도의 관점을 대체하라”¹⁾

I. 서론: 문제제기와 기존 연구 검토

본 논문의 목적은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시한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통해 전통시기 동아시아의 위계적 국제관계를 지칭하는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The Chinese World Order)’를 분석하는 것이다.²⁾ 본 논문은 중국적 세계질서가 구성국들의 ‘자율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중국 통치 권력의 전략적 기획이라고 주장한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주권 규범을 정립한 이후 서구 국제질서가 국가간 평등성을 전제해 왔다면,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과의 문화적·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국가간 위계성을 가정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계성을 힘의 우열에 따른 강압적(霸道)인 것이 아니라 ‘도덕성(morality)’에 기초한 자발적이고 평화적(王道)인 것이라고 가정한다.³⁾ 페어뱅크(John K. Fairbank)에 따르면, ① 조선과 베트남은 중국적 세계질서의 핵심지역인 ‘중화지역(Sinic Zone)’을 구성하며, ② 몽골과 같은

1 “Move outside the institution and replace it with the overall point of view of the technology of power.”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New York: Palgrave, 2007), p. 117; 미셸 푸코 지음, 오토트랑망 역,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p. 170.

2 중국적 세계질서는 페어뱅크가 정립한 개념이다.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2. 반면, ‘천하(天下)’ 개념은 이에 상응하는 전통적 개념이다. 『맹자』 시대에 천하 개념은 이미 단순한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천자가 통치하는 대상(개인, 가정, 국가)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김한규, 『천하국가』 (서울: 소나무, 2005), pp. 46–49. 본 논문은 중국적 세계질서를 천하질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3 赵汀阳, 『天下体系: 世界制度哲学导论』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pp. 54–57; 干春松, 『重回王道—儒家与世界秩序』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12), pp. 54–55; David C. Kang,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p. 82–106; Yan Xuetong, “A Comparative Study of Pre-Qin Interstate Political Philosophy,” in Daniel A. Bell (ed.),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 40.

유목 민족은 그 바깥의 '내아시아지역(Inner Asia Zone)'에 위치한다. 반면, ③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비유교권 국가들은 '외부(Outer Zone)'에 위치한 이적으로 간주된다.⁴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적 세계질서는 ① 중국의 중앙권력이 직접 통제하는 '내속(內屬),' ② 봉건적 책봉조공 관계인 '외신(外臣),' 그리고 ③ 중국과 위계적 관계를 이루지 않는 '불신(不臣)' 지역으로 구성되는 동심원적 위계질서라고 간주된다.⁵

중국적 세계질서는 진·한 이후 1895년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으로 선언되는 시기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양(Lien-sheng Yang)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이 실제와 항상 부합했던 것은 아니다.⁶ 플레처(Joseph F. Fletcher)에 따르면, 명청 시기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제관계는 위계적이지 않았으며, 조공관계는 경제적 이득의 확보라는 실리적 목적에 지나지 않았다.⁷ 사실, 중국적 세계질서 개념을 정립한 페어뱅크조차도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이 희망하는 관념적 이상형이며, 실제에서는 다종의 국가간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 중국과 조선, 베트남의 관계가 그 이상형이 가깝다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는 군사적 우열과 경제적 이윤이라는 현실주의적 동인에 따라 구축되었다는 것이다.⁸ '신청사학(New Qing History)'의 맥락에서, 로사비(Morris Rossabi) 역시 송과 요, 금의 평등한 관계를 근거로 중국적 세계질서가 단일한 형태로 장기 지속되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⁹ 김한규도 전한 초기

4 Fairbank (1968), pp. 2-3.

5 高明士 著, 『天下秩序与文化圈的探索』(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pp. 22-23; 김한규 (2005), p. 33.

6 Lien-sheng Ya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20-22.

7 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1368-1884,"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206-224.

8 Fairbank (1968), pp. 12-13.

9 Morris Rossabi, "Introduction,"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 1-16. '신청사'는 단일하고 정형화된 중국사의 일부로 청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청의 특수한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Ruth W. Dunnell and James A. Millward,

흥노에 대한 화친정책이나 토번에 대한 당 태종의 화친정책을 근거로 중국적 세계 질서의 실체가 가변적이었음을 강조한다.¹⁰

국제정치학의 맥락에서도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위계성은 국가 간 평등성을 강조하는 서구 근대 국제질서의 주권규범만큼이나 현실과 괴리된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¹¹ 박홍서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가장 그럴 것 같은 사례(most likely case)’인 중국-조선 관계조차도 전략적 사고와 행태가 팽배한 위선적 관계였다고 주장한다.¹² 존스톤(Alastir Ian Johnston)은 중국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가 군사력에 의한 문제해결인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며,¹³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강(David Kang)이 주장하는 전통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수성을 비판하면서,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른 갈등적 관계가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한다.¹⁴ 왕(Wang Yuan-Kuan)도 동일한 맥락에서 만리장성의 축조는 방어성의 발로가 아니라 몽골에 대한 일련의 선제공격이 실패한 이후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한

“Introduction,” i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London: RoutledgeCurzon, 2004), pp. 3-4; James L. Hevia,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5), pp. 9-14.

10 김한규 (2005), pp. 42-44, pp. 88-89, pp. 184-185.

11 Stephen Krasner,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1 (2001), pp. 173-197. 크래스너에 따르면,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범 지향적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는 국가 간 관계에서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3-9.

12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2010), pp. 7-27

13 Alastir Ian Johnston, *Cultural Realism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8), Chapter 4.

14 Amitav Acharya,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28-3 (Winter 2003/4), pp. 154-155. 강의 주장은 David C. Kang,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27-3 (Spring 2003), pp. 57-85.

다.¹⁵

이와 같다면, 결국 핵심적 문제는 규범과 실제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한족과 이 민족 정권을 막론하고 '중국의 통치 권력은 왜 진·한 이후 19세기 말까지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을 고수하려 했는가'이다. 즉,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는 왜 그토록 장기간 고수된 것인가? 사실, 송의 대요, 대금관계도 그것이 비록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송의 통치 권력이 위계적 국제질서 관념을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005년 송이 거란과 대등한 형제관계를 맺고 더욱이 매년 세폐를 바치기로 약속(澶淵之盟)했음도 불구하고 송의 통치 권력은 이를 오랑캐에 대한 전통적 기미책(羈縻策)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¹⁶

기존 연구들 역시 중국적 세계질서에 투영된 통치 권력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주목한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재를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페어뱅크도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적 세계질서가 실제로는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만의 '대 설계(grand design)'임을 인정하고 있다.¹⁷ 아울러, ① 중국적 세계질서는 국내정치를 위한 유용한 이데올로기 기제였다거나,¹⁸ ② 중국의 통치 권력이 개발한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는 지적,¹⁹ ③ 18세기말 청과 영국의 접촉에서 나타난 갈등은 문화적 이유가 아니라 통치 권력간 이해관계의 불합치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주장,²⁰ 그리고 ④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지배를 회피함으로써 패권적 통치비용의 감소와 제국의 유지를 동시에 가능케 하려는 정치적 기획이

15 Wang Yuan-Kuan, *Harmony and War: Confucian Culture and Chinese Power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pp. 121-126.

16 王晓波, "对澶渊之盟的重新认识和评价,"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年 第4期, pp. 117-118. Wang Gungwu,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 56-61.

17 Fairbank (1968), pp. 12-13.

18 Fletcher (1968), p. 224.

19 Rossabi (1983), p. 1.

20 Hevia (1995), p. 28.

었다는 주장²¹ 역시 이와 상통한다. 아울러, 국제정치학의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 이론에 기반해 중국적 세계질서를 중국과 주변국간 막대한 힘의 비대칭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거나,²² 주변국이 중국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한 중국은 그들에게 집단안보를 보장하는 상호간 ‘사회계약적’ 속성을 가진다는 주장²³ 역시 중국적 세계질서에 투영된 전략적 의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적인 중국 측 시각들과 달리 중국적 세계질서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이 통치권력의 기획일 수 있다는 비판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중국적 세계질서에 투영된 권력의 통치 전략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즉, 이들 논의는 그것이 역사학(신청사학)적 맥락이든 혹은 국제정치학(신현실주의)적 맥락이든,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사회학적 권력이론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달리 푸코가 제시한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통해 중국적 세계질서에 투사된 권력의 통치 전략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그 차별성을 가진다.²⁵ 특히, 본 논문은 중국적 세계가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스스로 피통치 주체화

21 김한규 (2005), pp. 828–833.

22 박홍서 (2010), p. 14; Acharya (2003/4), p. 155.

23 Lai-Ha Chan, Pak K. Lee, and Gerald Chan, “China's Vision of Global Governance: A Resurrection of the “Central Kingdom”?” in Mingjiang Li (ed.), *China Joins Global Governance* (Lexington Books: Lanham, 2010), pp. 16–17; 김한규,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정두희 이경순 편, 『임진왜란-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 313.

24 중국적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 측 연구들은 주로 제도나 기능분석의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적 세계질서의 장기지속을 유교의 ‘대일통(大一統)’ 사상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천하관의 ‘무외(無外)’사상으로 인한 포용성, 그리고 문화적 경계와 정치적 경계의 통합을 지양하는 조공체제의 특성 등으로 설명하려 한다. 金观涛·刘青峰, 『兴盛与危机: 论中国社会超稳定结构』 (北京: 法律出版社 2011), pp. 26–45; 赵汀阳 (2011), pp. 40–41; 王小红·何新华, 『天下体系: 一种建构世界秩序的中国经验』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2014), pp. 103–104;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 『아시아는 세계다』 (서울: 글항아리, 2011), pp. 14–17.

25 반면, 통치성 개념에 기초해 현대 중국의 대내적 정치사회문제(인구, 종교, 환경 정책 등)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Elaine Jeffreys (ed.), *China's*

시키는지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진행한다. 2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푸코는 통치성 개념을 통해 실재라고 가정되는 정치사회적 제도들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한다. 즉, 푸코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 당하는가?' 혹은 '통치제도는 무엇인가?' 등의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효과(effects of power)'에 주목한다. 중국적 세계질서가 권력에 의해 기획된 전략이라면, 이에 대한 분석은 결국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시기 동아시아의 정치사회 문제를 통치성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유교 규범이 개인들의 자기주체화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거나,²⁶ 유교적 통치성을 현대의 민주주의나 다문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연구²⁷ 등으로 그 분석대상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문제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정용넨(鄭永年)은 중국적 세계질서를 분석하면서 푸코의 일반적인 권력 이론을 거론하고 있기는 하나 통치성 개념을 그 분석에 적용하는 것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통치성 개념을 통해 중국적 세계질서를 분석한다.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는 유교의 '삼강(三綱)' 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 내 행위자간(군신, 부자, 부부) 이상적 위계관계를 그대로 국제관계로 확장시킨 일종의 '글로벌(global)' 통치성이라 할 수 있다.²⁹ 서구에서 글로벌 통치성이 자유

Governmentalities: Governing Changing, Changing Government (New York: Routledge, 2009); Susan Greenhalgh and Edwin A. Winckler, *Governing China's Population: From Leninist to Neoliberal Bio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05) 참조.

26 Minjoo Oh and Jorge Ardit, "Self-Cultivation as a Microphysics of Reverence: Toward a Foucauldi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Philosophy East & West* 60-1 (2010), pp. 20-39; Kim, Taeyon, "Neo-Confucian body techniques: women's bodies in Korea's consumer society," *Body & Society* 9-2 (2003), pp. 97-113.

27 Chaibong Hahm, "Confucian Rituals and the Technology of the Self: A Foucauldian Interpretation," *Philosophy East & West* 51-3 (2001), pp. 315-324; 심승우, "다문화주의와 유교적 통치성의 현대화," 『한국학연구』 32 (2010), pp. 287-315.

28 鄭永年, 『通往大国之路: 中国与世界秩序的重塑』(北京: 东方出版社, 2011), pp. 149-154.

29 Fairbank (1968), pp. 5-6. 글로벌 통치성에 대한 논의는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주의 시기 이후에야 비로소 출현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적 세계질서가 애초부터 국제관계의 유용한 관리기제로 작동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우선 2장에서 본 논문은 푸코의 통치성의 개념과 그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에 기반해 3장에서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을 ‘지배 기술’과 ‘자아 기술’로 구분해 설명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중국적 세계질서가 가지는 현재적 함의를 간략히 설명하고 전망할 것이다.

II. 푸코의 계보학과 통치성

푸코는 자신의 연구 전반에 걸쳐 영속적이고 객관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합리주의적 지식관을 거부하고, ‘객관적’ 지식에 작동하는 권력의 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푸코는 각 사회마다 권력이 구축한 ‘진리체계(regime of truth)’가 존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제 지식의 참과 거짓이 판별된다고 주장한다.³⁰ 이러한 지식사회학적 인식론으로부터 푸코는 자신의 연구 기획을 “인간의 현존 방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에 저항하며, 현재의 제도들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를,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한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규정 내린다.³¹ 이에 따라, 푸코는 감옥, 광기, 그리고 성(sex)과 같이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되어져온 현상이나 제도들이 권력체계에 의해 어떻게 구조되어 왔는가를 비판적으로 해체한다.

‘계보학(genealogy)’은 푸코가 그러한 연구기획을 수행하는 데 채용한 연구전략이다. 푸코에 따르면, 계보학의 목표는 권력의 ‘과학적’ 담론에 의해 억압되어져 온 ‘국부적(local)’ 지식들을 ‘탈복종화(desubjugate)’시키고 아울러 ‘재활성화

Doucet, “Introduction: the global governmentalization of security and the securitization of global governance,” in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eds.), *Securi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Governacne and the State* (New York: Routledge, 2010), pp. 8–12 참조.

30 Michel Foucault, “Truth and Power,”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a), pp. 316–317.

31 문성훈,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서울: 길, 2010), p. 21에서 재인용.

(reactivate)'시키는 것이다. 즉, 계보학은 “억압된 지식들의 봉기(insurrection of subjugated knowledges)”를 가능케 하는 방법론인 것이다.³² 따라서 푸코는 자신의 계보학적 연구전략을 주류 과학의 제도주의적 혹은 기능주의적 접근과 확연히 구분한다. 그것들이 제도나 조직을 ‘실재’로 전제하고 설명하는 데 치중한다면, 계보학적 방법은 “각각의 제도 밖으로 나와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라는 포괄적 관점으로 제도의 관점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제도를 논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개인·집단·이들을 지배하는 규칙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규칙성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배치, 확실히 개인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권력형태의 특징적인 연결망·흐름·중계·거점·잠재적 차이”인 것이다.³³

국가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 역시 이러한 계보학적 연구전략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푸코가 주목하는 국가에 관한 문제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 당하는가?’ 혹은 ‘통치제도는 무엇인가?’ 등의 정태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효과이다. 푸코가 정립한 통치성 개념은 이와 같이 국가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류 사회학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식으로부터 생성된 개념이라면, 통치성 개념은 그러한 거버넌스 자체를 문제삼는다. 즉, 거버넌스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의 전략은 무엇인가?³⁴

구체적으로, 푸코는 권력이 행사하는 일련의 통치 ‘기술들(technologies)’에 주목

32 Michel Foucault, “Two Lectures,” in Steven C. Roach (ed.),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8), pp. 317–320.

33 미셸 푸코 지음, 오토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서울: 난장, 2011), p. 170.

34 고든에 따르면, 푸코는 ‘통치성(rationality of government)’과 ‘통치술(art of government)’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Colin Gordon,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 3. 통치성과 거버넌스의 차이는 이문수, “통치(Government), 통치성(Governmentality),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 (2009), pp. 71–90 참조.

한다. 푸코는 이러한 통치기술을 ① 권력이 통치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지배 기술(technologies of domination)’과 ② 통치 대상 스스로 자신들을 피통치 주체로 변화시키는 ‘자아 기술(technologies of self)’로 구분한다. 지배 기술이 권력과 통치 대상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행사되는 기술이라면, 자아 기술은 통치 대상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기술이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지배 기술과 자아 기술이 상호보완적일 때 비로소 효율적 통치가 가능하다. 즉, 지배 기술과 자아 기술의 접점에서 ‘온전한’ 통치성이 구축된다는 것이다.³⁵

푸코는 지배·자아 기술이 역사성을 가지는 권력의 유형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역사적으로 권력 유형은 ① ‘사법주권(juridical sovereign)’ 권력, ② ‘규율(disciplinary)’ 권력, 그리고 ③ ‘조절(regulatory)’ 권력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력유형은 각각의 지배·자아 기술을 가진다. 우선 지배 기술의 측면에서, 중세 시기의 주도적 권력 유형인 사법·주권 권력은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 분할에 기초해 금지된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폭력 기술을 구사한다. 이에 반해 절대국가 시기 출현한 규율권력은 ‘감시’와 ‘교정’ 기술을 통해 개개인을 ‘순종적’인 통치대상으로 주조해낸다. 반면, 18세기 자유주의 시대에 출현한 조절권력은 이전 권력 유형처럼 통치대상을 억압하기보다는 통치에 ‘경제적 합리성’을 도입한다. 즉, 통치 대상(인구)에게 행동의 최적치를 설정해주고 그에 따라 자율적 행동을 가능케 함으로써(즉, 내버려둠으로써) 통치비용은 줄이되 그 효용은 유지하는 통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지배 기술은 양치기의 방목 기술에서 연유한 기독교의 사목 기술을 인간에 대한 통치에 접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한편, 푸코는 자신의 후기 연구에서 이전 연구가 주로 권력의 지배 기술을 분석

35 Michel Foucault, “Technologies of the Self,”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c), pp. 146–147; Graham Burchell, “Liberal government and techniques of the self,”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and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20–21.

36 미셸 푸코 (2011), pp. 22–27, pp. 83–85, pp. 145–146.

하는 데만 치중했음을 반성하면서, 인간이 스스로를 피통치 주체화시키는 '자아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다.³⁷ 특히 푸코는 권력의 통치 행위와 통치 대상들의 '자유(freedom)'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의 행사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지도하려는 행동(conduct of conduct)"이라 할 수 있다. 즉, 권력의 행사인 통치는 "통치당하는 대상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구축(structure)"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 대상들이 '스스로 행동'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권력 행사는 불가능하며 그것은 물체간 역학관계와 다름 아닌 것이 된다. 노예와 같이 자유를 박탈당한 주체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 결정주의에 따라 반응하는 물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통치 대상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는 보다 완전한 통치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측면에서 18세기 등장한 자유주의 통치성(조절 권력)의 자아 기술은 사법·주권 권력 및 규율 권력의 자아 기술 보다 강력하다.³⁹ 더욱이 20세기 후반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보다 극대화된 자아 기술을 행사한다.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은 통치 대상들을 '일인기업'으로 만들어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피통치 주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자동인형'으로 전락한다. 통치대상에 대한 권력의 '원격통치(governing at a distance)'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은 직접 통치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그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통치의 경제성을 확보한다.⁴⁰

37 Foucault (2003c), p. 147; 미셸 푸코 (2011), pp. 86-88. 이러한 '주체'의 문제는 '해방의 기획'으로서 수행된 푸코의 권력 연구가 제시하는 최종적 화두이기도 하다. 푸코에 따르면, 인간의 해방은 체제나 제도로부터 벗어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주체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Michel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b), p. 134.

38 Foucault (2003b), pp. 138-139.

39 미셸 푸코 (2011), p. 24;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자유주의와 권력』 (서울: 후마니타스, 2014), pp. 84-85.

40 미셸 푸코 씀, 오르트망 옮김,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2012), pp. 222-227; Burchell (1996), pp. 23-30; 사토 요시유키 (2014), pp. 34-56. '원격통치' 개념은 Nikolas Rose, "Liberal government and techniques of the self,"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and Nikolas

통치성에 대한 논의들은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사실, 푸코의 통치성 연구는 강력한 근대국가의 등장이라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적 상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실, 푸코조차도 16세기 이후 등장한 국가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 전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⁴¹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서구식 주권 개념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있어서는 진·한 시대부터 이미 강력한 주권국가적 특성을 보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⁴² 통치성 연구의 전제조건이 강력한 국가의 존재라면, 전통시기 동아시아는 그러한 조건을 이미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가 가지는 고도의 ‘통치 합리성(rationalities of govern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구 국가의 통치성은 역사적으로 효율적 통치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그 극대화된 전략으로서 자유라는 명분으로 통치 대상 스스로가 자신을 통치케 한다. 이에 비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 전략이 역사적으로 큰 변화 없이 장기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이미 매우 효율적인 통치기제였음을 추론케 한다. 중국적 세계질서가 강조하는 ‘왕도(王道)’ 규범에는 통치의 비대화를 차단하려는 권력의 합리적 의도가 드러난다. 즉,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패도정치는 필연적으로 대국화를 초래하며, 덕으로 상대를 감화시켜 복종케 하는 왕도정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에는 자율적 통치 대상들을 주조해 내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⁴³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가 가지는 구체적 통치기술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그 지배 기술과 자아 기술로서 ‘기미책’과 ‘군자 주체화’를 분석한다.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46–61 참조.

41 Foucault (2003b), p. 131.

42 박상섭, 『국가, 주권』 (서울: 소화, 2009), pp. 236–237; 김상준,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서울: 글항아리, 2014), p. 67.

43 『孟子』公孫丑 上: 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大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III.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자율적' 위계 만들기

위계적 국제질서의 구축이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이 가지는 핵심적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권규범에 기초한 근대 국제질서 속에서도 국가간 위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미국적 세계질서가 비록 중국적 세계질서처럼 공인된 위계질서는 아니더라도 지배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힘의 '비공식적'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⁴⁴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적 세계질서의 핵심은 그 위계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성'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적으로도 관리해야 할 광활한 영토와 막대가 인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치비용을 초래하는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통치 전략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적 세계질서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미책(羈縻策)'과 '군자 되기'는 그것이 모두 통치 대상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중국적 세계질서의 지배 기술: '기미책(羈縻策)'

기미책은 '말의 굴레(羈)'와 '소의 고삐(縻)'를 적절히 씌워서 마소를 부리듯이, 주변국에 대해서도 완전한 관계단절이나 과도한 영향력의 행사 모두를 자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이 칭신하는 이상 그들을 외신(外臣)으로 대우해 통치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물리적 침공을 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관제나 세금을 강제하는 내신(內臣; 六服)처럼 주변국을 '개별인신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봉을 통해 그들의 '군장만을 통치(君長人身統治)'하고 그 군장들로 하여금 각각의 지역을 통치케 함으로써(以夷治夷) 통치비용을 절감한다. 주변국을 내신으로 지배할 경우 중국이 짊어져야 할 정치 경제적 부담을 차단한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⁴⁵

44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서울: 한길사, 2009), pp. 163-168.

45 『尙書·周書·周官』: 王者之於夷狄 羈縻而已 不可同於華夏 故惟舉六服; 『史記』司馬相如

사실, 패권의 위기에 직면한 지배국가는 대외적 세력권을 축소하거나, 차상위 강대국을 ‘포섭’해 자국의 패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인다. 동로마 제국이 방어가 어려운 서부지역을 세력권으로부터 제외해 제국의 장기지속에 성공했다거나, 미국이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과도한 세력 확대를 자제하고 대중국 관계개선을 통해 역내 질서를 관리하려 했다는 사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⁴⁶ 기미책 역시 한 무제 시기 공세적 대외 확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은 대내적 안정을 이루는 무제 시기에 이르러 주변국에 대한 화친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한은 흉노, 남월, 조선 등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변군(邊郡)’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 팽창은 대내적으로는 한의 중앙재정을 악화시키고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무제 스스로 ‘윤대의 조(輪臺詔)’를 내려 대외적 군사행동의 자제와 민생안정에 전력할 것을 공식화하고, 이후 소제(昭帝)는 기원전 81년 ‘염철회의(鹽鐵會議)’를 개최해 이러한 정책변화를 재확인하였다.⁴⁷

한 시기 수립된 기미책은 이후 19세기 청까지 유지되었다. 물론, 중국 중앙왕조의 세력변화에 따라 기미책은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사되었다. 예를 들어, 대내적으로 강력한 통일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던 당은 630년 돌궐을 무력으로 복속시킨 이후 토번과 고구려 등 주변국들을 패퇴시키고 각지에 도호부(都護府)와 기미부주현(羈縻府州縣)을 설치해 “외신(外臣)의 내신(內臣)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傳: 盖聞天子之於夷狄也 其意羈縻勿絕而已. 高明士 (2008), p. 32, p. 51에서 재인용; 김한규 (2005), pp. 120-121, p. 829; Yang (1968), pp. 31-33.

46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2-193; 박홍서 (2010), pp. 13-15.

47 김한규 (2005), pp. 103-110. 반면, ‘윤대의 조’는 후대 사가인 반고(班固)가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윤대의 조 이후에도 한의 대외적 공세정책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陳金霞, “汉武帝《轮台诏》并非罪己诏,” 『河南师范大学学报』, 第35卷 第6期, 2008年11月, pp. 110-1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유교의 국가화가 완성된 후한대의 정서가 대외팽창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호부 체제 역시 그 지역의 수장을 도독(都督)으로 임명해 세습케 하고 본래의 풍속에 따라 통치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조공책봉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당이 기미부주 현을 내신이 아니라 여전히 조공책봉관계를 맺은 외신의 하나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도호부체제가 제국주의적 직할통치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도호부체제는 당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 편승하려는 주변국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⁸

강성한 군사력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켰던 원(元)조차도 그들 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할 통치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271년 쿠빌라이가 대원제국을 건국한 이후 원은 적극적으로 역대 왕조들의 국가 통치방식을 수용하고 전통적인 기미책을 활용하였다. 즉, 내지에는 10개의 행중서성(行中書省)을 설치해 군현제적 직접 통치를 실시하는 한편 그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자율적 통치를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티베트와는 '공시단월(供施檀越)' 관계를 수립해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는 대가로 정치적 권위를 보장했으며, 고려는 왕실 간 결혼을 통해 부마국으로 대우하고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특히, 원이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해 남송과 일본을 복속시키려 했던 시도는 패권유지 비용을 주변국에 효율적으로 분담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 주기도 한다.⁴⁹

원을 붕괴시키고 한족에 의해 건국된 명 역시 태조 홍무제(洪武帝)의 『황명조훈(皇明祖訓)』에서 드러나듯 기미책을 기본적 대외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홍무제는 후손에 대한 고언 형식의 글을 통해 주변 이민족과 교린 하되, 그들이 위협적이지도 않음에도 중국의 부강함에 의지해 징벌하려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였다.⁵⁰ 이러한 외교노선은 이후 명이 강력한 해금 정책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영락제 사후 정화의 해외원정을 전격적으로 중단한 것도 몽골의 위협이 가

48 김한규 (2005), pp. 189-195; 高明士 (2008), p. 51, p. 60.

49 김한규 (2005), pp. 258-264; 박홍서 (2010), p. 15.

50 『皇明祖訓』 祖訓首章: "...彼既不为中国患, 而我兴兵轻伐, 亦不祥也. 吾恐後世子孫, 倚中国富强, 贪一时战功, 无故兴兵, 致伤人命, 切记不可. 홍성규, "明代 北邊의 互市와 朝貢," 『중국사연구』 제72집 (2011), pp. 70-71.

중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력 확장을 차단하려는 합리적 사고의 결과였던 것이다.⁵¹

베트남에 대한 청의 행태 역시 이러한 기미책에 근거한다. 1788년 베트남 레(Le 黎) 왕조가 응웬 후에(Nguyen Hue)의 반란세력에 의해 전복되자 청은 레 왕조 복위를 명분으로 군사개입을 단행하였다. 청은 상국으로서 ‘충순한’ 조공국을 구원한다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레 왕조를 복원시킨 직후 즉각적으로 철군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국의 ‘진정성’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군하던 청군이 반란군에 패퇴하고 그 결과 레 왕조가 최종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청은 증원군을 동원하기 보다는 반란세력이 수립한 떠이선(Tay Son · 西山) 왕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하였다. 청은 레 왕조가 ‘천명’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붕괴되었고 아울러 응웬 후에가 이미 칭신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자국의 행태를 정당화하였다. 새로운 베트남 정권이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을 이미 수용할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군사행동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⁵²

한편, 기미책은 중국의 물리적 역량이 약화되는 시기에도 효율적 통치를 확보하는 유용한 통치기술로 작동하였다. 즉, 강성한 주변국이 중국에 대해 공세적인 압박을 가해올 경우 중국은 그들에 대한 불가피한 유화책을 단지 ‘마소의 고삐를 늦췄을 뿐’이라는 논리로 정당함으로써 비대칭 세력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송은 ‘전연의 맹(澶淵之盟)’을 통해 거란과의 관계가 실제로 대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변 오랑캐에 대한 기미책의 일환이라고 정당화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19세기 후반 조선에 대한 청의 행태도 현실적으로 불리한 세력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의 소산이었다. 당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의 사건을 둘러싸고 서구제국이 중국의 적극적 중재요청을 희망하였으나, 중국은 “속국의 외교와 내치는 자주”라는 원

51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p. 7.

52 Truong Buu Lam, “Intervention versus Tribute in Sino-Vietnamese Relations, 1788–1790,”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169–171, pp. 178–179.

칙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다.⁵³ '소중화'를 자처하는 조선 역시 이러한 기미책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기미책이 중국을 넘어 중국적 세계질서의 보편적인 통치기술이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조선은 1627년 오랑캐라고 치부하던 후금과의 형제관계를 맹약(丁卯和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미책으로 화친을 허락하여 병화를 늦추는 것이 오랑캐를 대처하는 방책"이라고 정당화했던 것이다.⁵⁴

물론, 이러한 기미책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해서는 주변국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국으로서는 무력에 제압당하지 않는 한 중국적 세계질서에 남아 있어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주변국은 중국을 섬기고 중국은 소국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구제하고 부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소위 '사대자소(事大字小)' 개념은 이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한다.⁵⁵ 임진왜란기 명의 대조선 파병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명은 임진왜란을 '항왜원조(抗倭援朝)'나 '동원일역(東援一役)'으로 규정하고 "대대로 동변(東藩)을 지켜오면서 공손함을 다한 조선의 환란을 처연히 여겨 구원"한다는 논리를 통해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⁵⁶ 아울러, 주변국과의 조공관계 역시 중국의 시혜적 성격이 드러난다. 명시기 주변국은 조공의 대가로 막대한 회사(回賜)를 확보하고 조공시 각종 부탑(附搭) 화물을 중국 현지로 들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다. 16세기 중반 가정제(嘉靖帝)가 엄격한 해금정책에 입각해 주변국에 대한 조공과 호시(互市)를 통제하자 몽골과 왜구의 위협(北虜南倭)이 증폭되었다는 사실은

53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서울: 해안, 2007), p. 24, p. 56.

54 『仁祖實錄』 5年 4月1日 丁酉: 姑許羈縻, 以緩兵禍, 似合待夷之策.

55 김한규 (2005), pp. 68-70. 김한규는 '조공책봉' 관계와 '사대자소' 관계를 구별한다. 전자가 국가 간 위계성을 공식화하는 규범이라면, 후자는 세력의 차이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관계로 공식적 위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56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재조지은'의 형성과 그 의미," 『동양학』 제29집 (1999), pp. 132-134; 『宣祖修正實錄』 25年 9月1日 丁巳: 爾國, 世守東藩, 素效恭順... 近聞倭奴猖獗... 念茲淪蕩, 朕心惻然. 昨傳告急聲息, 已勅邊臣發兵救援.

주변국이 조공을 경제적 이득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⁵⁷

아울러, 기미책이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었다. 중국적 세계 질서가 ‘삼강’에 기초한 위계적 국제관계라면, 따라서 그러한 규범을 위배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징벌(刑)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인간의 생명을 권력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조절권력에서도 ‘죽이는 권력’으로서의 주권 권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푸코가 강조하듯, ‘칼’로 상징되는 주권권력은 언제나 통치라는 “복합적인 건조물”의 핵심적인 버팀목으로 작동하는 것이다.⁵⁸ 개인의 자발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통치성조차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저항에 대해서는 결국 ‘폭력적 일면(martial face)’을 드러낸다.⁵⁹ 덕의 정치를 강조한 공자조차도 “군자는 형(刑)을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는 표현에서 드러내듯, 피통치 주체에 대한 강제적 힘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⁶⁰

상술한 염철회의도 법가에 대한 유가의 일방적 승리라 볼 수는 없다. 염철회의를 통해 유가는 관료조직의 상층부를, 법가는 중하층부를 차지하는 소위 ‘유가으로써 법가를 가리는(以儒飾法)’ 정치적 절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⁶¹ 실제로 유가와 법가의 상호보완적 통치 전략은 수의 고구려 침공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수가 내세운 고구려 침공 이유는 “고구려가 조공하지 않고 예를 저버렸기 때문 토벌”한다는 것이었다.⁶² 1882년 임오군란 시기에 청이 대원군을 납치하면서 내세운 논리 역시 동일하였다. 청은 임오군란의 배후로 대원군을 지목해 압송하면서 “예의의 나라인 조선에서 이런 무례한 일이 있었으니 중국은 추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⁶³

57 홍성구 (2011), pp. 75-82.

58 미셸 푸코 (2011), pp. 26-27, pp. 161-162.

59 Majia Holmer Nadesan, *Governmentality, Biopower, and Everyday life* (New York: Routledge, Kindle edition, 2008), locations 1019-36.

60 『論語』 里仁：君子懷刑 小人懷惠；李澤厚 (2008), p. 129.

61 김한규 (2005), pp. 109-110; Yan (2011), p. 41.

62 『隋書』東夷百濟傳：往歲爲高麗不供職貢，無人臣禮，故命將討之；高明士 (2008), p. 58에서 재인용.

63 『興宣大院君史料彙編』 석파학술연구원 편 (서울: 현음사, 2005), p. 528.

2. 중국적 세계질서의 자아 기술: '군자 나라' 되기

효율적인 통치가 지배 기술과 자아 기술이 상호보완적일 때 가능하다면, 중국적 세계질서 역시 기미책이라는 지배 기술과 아울러 주변 국가 스스로 중국적 세계질서의 자율적인 구성원이 되게 만드는 자아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중국적 세계질서가 중국과 주변국의 물리적 세력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중국의 세력이 약화돼 주변국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중국적 세계질서는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는 주변국에게 그들이 중국적 세계질서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합리적 동인이 있다.⁶⁴ 서구 기독교 질서가 자기를 희생하고 부정(renunciation)하는 행위자를 이상적 주체로 주조하고,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한경쟁에서 승리하는 행위자를 '정상적' 주체로 간주하듯, 중국적 세계질서도 그에 최적화된 주체를 주조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⁶⁵

사실, 현대적 의미의 연성권력(soft power) 전략인 왕도정치 규범은 지배 기술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통치 대상들 스스로의 피통치 주체화를 가능케 하는 자아 기술로서의 효과도 가진다.⁶⁶ 공자는 멀리 있는 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라 예악(禮樂)을 신장시켜 귀순케 하고 돌볼 것을 강조한다. 맹자 역시 힘에 의한 통치는 피치자들이 단지 힘이 부족해 복종하는 것이며, 반면 덕에 의한 통치는 마음속으로부터 즐거워 진심으로 복종한다고 주장한다.⁶⁷

중국적 세계질서가 규정하는 최적화된 주체는 누구인가? 유교가 상정하는 최고의 인간형인 '군자(君子)'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는 군자를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춘 최상의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덕성이 결여된

64 Fairbank (1968), p. 11.

65 기독교의 자아 기술은 Foucault (2003c), p. 158 참조.

66 연성권력과 왕도정치의 유사성은 陈季冰, "软实力与王道," 『南方都市报』 2009年1月21日 참조. <http://chenjibing.blog.sohu.com/108962467.html> (검색일: 2014. 12. 5).

67 『論語』 季氏: 故遠人不服, 則脩文德以來之. 既來之, 則安之; 『孟子』 公孫丑 上: 以力服人者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주체를 ‘소인(小人)’으로 폄하한다.⁶⁸ 따라서 군자는 각 행위주체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되며 소인은 그 반면교사가 된다. 특히, 정치 엘리트 집단의 경우 군자로 공인 받는다는 것은 유학적 지식체계를 자신의 삶에 구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결과 그의 언행은 타인이 본 받아야 할 행동규범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갈등하는 사회세력 간의 논쟁은 일반적으로 “나는 군자이며 너희들은 소인”이라는 ‘색깔론’으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문묘종사(文廟從祀)’나 ‘예송(禮訟)’ 문제를 둘러싼 당쟁은 항상 군자 대 소인이라는 진영논리에 따라 전개되었던 것이다.⁶⁹

이러한 맥락에서 ‘군자 되기’는 기미책이라는 지배 기술을 보완하는 유용한 자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군자라는 주체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변혁가능성을 차단하고 체제안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공자가 군자라는 인간형을 사회분열이 최고조에 달한 춘추전국시기 사회적 안정을 희구하려는 의도에서 정립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군자는 사회계급적으로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복레파’이며, 소인은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던 신흥지주 및 상공업 계급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⁷⁰

『논어』에 나타나는 군자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들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뒷받침한다. “군자는 의(義)에서 깨달음을 얻고, 소인은 이(利)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개념 정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⁷¹ 맹자의 사단론(四端論)에 따르면, 의라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부터 나온다.⁷² 따라서, 군자가 의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행위의 기준이 자기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양

68 『孟子』盡心上：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69 김미영, “성리학에서 공적 ‘합리성’의 연원-군자/ 소인 담론을 중심으로,” 『哲學』 제76집 (2003), pp. 63-72.

70 赵纪彬, 『論語新探』(北京: 人民出版社, 1976), pp. 105-112; 조성열, “『논어』, 『맹자』에 나타난 군자/소인, 대인/소인 연구,” 『철학논구』 제34집 (2006), pp. 8-14.

71 『論語』里仁：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72 『孟子』公孫丑章句 上：惻隱之心仁之端也 羞惡之心義之端也 辭讓之心禮之端也 是非之心智之端也.

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만큼 사회 변화와 상관없이 보수적인 주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반대로 사익에 따라 행동하는 소인은 외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타파적'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맥락에서 ① “군자는 자기로부터 구하고, 소인은 남으로부터 구한다,” ② “군자는 화합하나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나 화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③ “군자는 널리 포용하나 파당을 짓지 않고, 소인은 파당을 지으나 널리 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 정의들 역시 군자의 보수성을 시사한다.⁷³

물론, 군자 되기라는 자아 기술은 '의인화된' 통치 권력에도 적용된다. 즉, 권력자가 군자 되기에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타도까지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맹자는 탕왕이 걸왕을 타도하고 무왕이 주왕을 타도한 행위는 걸왕과 주왕이 군자의 덕목인 인과 의를 훼손한 '필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⁷⁴ “임금은 임금 같고 아버지는 아버지 같고 자식은 자식 같은” 것이 올바른 정치라는 공자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⁷⁵ 이러한 역성혁명에 대한 정당화는 결과적으로 중국적 세계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일조한다. 의인화된 통치 권력이 중국적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쿠데타를 통해 체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⁷⁶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적 세계질서 내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었던 군주에 대한 '간쟁(諫諍)' 행위나 '공론(公論)' 정치 역시 군주의 전횡을 견제함으로써 통치자에 의한 체제 위협을 견제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하였다.⁷⁷ 국가 간 관계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 주변국의 역성혁명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1788년 청이 베트남 반란세력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것도 중국적 세계질

73 『論語』衛靈公：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論語』子路：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論語』爲政：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74 『孟子』梁惠王 下：賊仁者 謂之賊 賊義者 謂之殘。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75 『論語』顏淵：景公問政孔子 孔子曰 君君臣臣父父子子。

76 Fairbank (1968) p. 12.

77 김영준, “조선왕조 초기 공론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간쟁, 공론, 공론수렴제도의 개념과 종류, 특성,” 『언론과학연구』 2권 (3)호 (2002), pp. 101-105.

서의 안정적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유교 규범의 ‘충서(忠恕)’ 개념은 군자 되기의 실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충서의 일반적 의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혈구지도(絜矩之道)’로 요약된다.⁷⁸ 따라서, 충서 규범은 서구 기독교의 황금률이나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개인 간 비침해 원칙 혹은 공평원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자신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정당하고, 타인의 자유와 동등한 정도의 자유만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서 규범은 결국 평등하고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계약 속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재한다.⁷⁹ 따라서 결과적으로 충서를 실천하는 군자들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도 안정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주체가 된다.

아울러, ‘신독(慎獨)’이라는 보다 규율적인 군자 되기 방법론도 제시된다. 신독 규범은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삼가고 경계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⁰ 신독 개념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을 따르면, 하늘의 상제는 “모든 것을 보고 있기(日監在茲) 때문에 군자가 되려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도 올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⁸¹ 감옥에 대한 푸코의 분석에서 드러나듯, 규율권력은 수감자들을 볼 수는 있지만 수감자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일망 감시 장치 ‘판옵티콘(panopticon)’을 통해 수감자들을 자기 규율적 주체를 주조해낸다. 이러한 측면에

78 『論語』衛靈公：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 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大學』前十章：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박원재, “인지상정의 윤리학: 유교적 규범론의 재음미,” 한형조 외,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서울: 한국국학진흥원, 2013), p. 240.

79 이상익, “유교의 忠恕論과 自由主義,” 『철학』80권 (2004), pp. 19-27; 李澤厚, 『論語今讀』(北京: 新華書店, 2008), pp. 346-347. 자오팅양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적 규범은 서구의 황금률과는 다르다. 중국의 규범이 타인의 제 상황을 배려한 ‘타자성’ 원칙에 기반 한다면, 황금률은 행위자 자신만의 ‘주체성’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편협하다. 趙汀陽 (2011), p. 56.

80 『大學』：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如惡惡臭，如好好色，此之謂自謙，故君子必慎其獨也。『中庸』：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

81 전병린, “다산의 中庸이해와 신독군자론(慎獨君子論)―『중용자잠(中庸自箴)』과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3권 (1982), pp. 43-48.

서 상제의 존재는 군자를 재생산해내는 일종의 극대화된 판옵티콘이라 할 수도 있다.⁸² 그러나 신독 규범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물리적 처벌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신독 규범이 생산해 내는 군자가 서구적 맥락의 규율권력이 주조해 내는 주체에 비해 보다 자율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다.

군자 되기라는 자아 기술은 공간적 범위를 넓히면 중국적 세계질서 속의 국가 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술한 지배 기술과 같이 군자 되기 역시 중국적 세계질서의 글로벌 통치 전략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은 스스로 삼강의 원리를 체현하고 예로써 중국을 상국으로 봉공하는 '군자 나라'가 되려는 자기 주체화를 시도한다. 중국의 대표적 조공국인 조선의 행태는 그 전형적인 사례일 수밖에 없다. 16세기에 들어 성리학적 교리가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 스스로 자국을 '소중화'라고 지칭할 만큼 중국적 세계질서의 일원이라는 자기 주체화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임진왜란 시기 명이 원병을 파병해 조선의 종묘사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경험한 이후 군자나라가 되려는 조선의 자기주체화는 극대화되었다.⁸³

1623년 인조반정 당시 반정세력이 발표한 광해군 폐지에 관한 교지는 이러한 조선의 자기주체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교지에 기재된 광해군의 죄목 중 대내적 이유는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죽인 '폐모살제(廢母殺弟)',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민생침해, 인사전횡, 그리고 과도한 백성 수탈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었으나, 대외적 이유는 명의 '재조지은'을 망각하고 오랑캐 후금과 교통하였다는 사실만이 교서 절반에 걸쳐 기재되었다. 특히, 반정세력은 광해군이 1621년 심하 전투에서 고의로 조선군을 후금에 투항케 한 행동을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퍼졌다"라고 힐난하고, 이후 명의 거듭된 파병 요청을 거절한 행위 역시 "예의의 나라인 조선을 금수의 나라"로 만든 행위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광해군의 대후금 유화책으

82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Random House 1995), pp. 200-202.

83 한명기 (1999), p. 120.

로 인해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조선이 패덕한 국가가 되었다는 반정세력의 자괴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⁸⁴

물론, 광해군 집권 시기 반정세력이 받았던 개인적·정치적 탄압이 쿠데타를 감행했던 보다 현실적인 이유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반정 직전 광해군의 왕명이 그의 대후금 유화책에 불만을 품은 대다수 신료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사실이나,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위를 지지하는 상소에 비해 대후금 유화책을 지지하는 상소가 반정 이전 5년간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광해군의 배명행위에 대한 엘리트 계층의 반감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반증한다.⁸⁵ 따라서, 반정세력의 관점에서는 인조반정은 패륜적 행위가 결코 아니며, 맹자가 강조하듯 패덕한 군주를 타도할 수 있다는 유교 규범과 부합하는 ‘정의로운’ 행동이었던 것이다.

명칭 교체 이후에도 조선이 ‘송명의리론(崇明義理論)’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는 사실 역시 ‘군자나라’가 되려는 조선의 자기주체화를 보여준다. 조선은 오랑캐인 만주족이 존주(尊周)인 명나라를 전복시키고 황제국을 참칭한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은 ‘북벌론’을 통해 청에 대한 복수를 내세운다거나, 대보단(大報壇)과 만동묘(萬東廟)를 건립해 명 황제에 대한 제사를 상례화하였다. 또한 존주휘편(尊周彙編)을 편찬해 전통적인 화이관을 재정립해 조선이 명의 ‘진정한’ 계승국임을 자인하기까지 하였다.⁸⁶ 18세기 청의 국력이 안정화 되면서 조선 엘리트 계층은 비로소 청을 유교문명을 계승한 중화제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이 ‘진정한’ 유교국가라는 관념은 버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현실적 북벌론 대신 ‘북학’을 통해 청의 문물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한 박지원조차 조선이 유교적 질서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인하였다. 심지어 그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

84 『光海君日記』 15年 3月14日 甲辰: 使我三韓禮義之邦, 不免夷狄禽獸之歸, 痛心疾首, 胡可勝言.

85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6권 (2008), pp. 448-453.

86 유미림, “조선 후기의 對중국인식: 송명과 반청, 그 이념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2001), pp. 279-287.

해 조선이 청 황제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제공하는 스승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⁸⁷

IV. 결론: 중국적 세계질서의 부활?

전략으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는 19세기 후반 '공식적'으로 붕괴되었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핵심국가이자 마지막 조공국이었던 베트남과 조선이 청불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인해 각각 근대적 국제질서의 자주독립국으로 공인 받았던 것이다. 중국적 세계질서가 통치 권력의 전략적 기획이라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해체는 결국 그러한 통치 전략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의 부활가능성은 그러한 통치 전략의 재출현이라는 문제로 치환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위계적 관계로서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편전쟁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까지 소위 '민족적 굴욕기'를 경험하고, 여전히 신장, 티베트,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국가 간 평등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주권 규범이 보다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율적' 국제관계를 기획하려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전략은 여전히 유의미한 효용성을 가진다. 그것은 국가 간 평등성을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 위계관계로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빈발하는 현재의 '미국적 세계질서'를 대체하고 아울러 중국의 과도한 대외 팽창을 방지케 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용넌은 중국적 세계질서의 자율적인 관계망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일방주의적 간섭과는 다르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⁸⁸

87 김성배, "청대 한국의 유교적 대중전략과 현재적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7집 (5)호 (2013), pp. 123-125.

88 郑永年 (2011), pp. 168-170. 미국주도의 현 국제질서가 비공식적 위계질서라는 설명은 이삼성

실제로 현재 중국은 자율적 국제관계를 함의하는 다양한 제법을 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화공존 5원칙’이나 ‘구동존이(求同存異)’ 개념은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기초해 상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적 국제관계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동반자관계(伙伴关系)’ 역시 자율적 국제관계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2014년 7월 현재 중국은 개별국가 및 아세안 등의 지역기구를 포함해 총 58개 대상과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일반적인 동맹관계가 조약 당사국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데 반해 동반자관계는 의무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국들의 자율성에 기초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는 동맹관계와 같이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형태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①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②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는 ‘전면적 전략(全面战略) 동반자관계’를, ③ 한국이나 인도 등과는 ‘전략적 합작(战略合作) 동반자 관계’를, ④ 파키스탄과는 ‘전천후 전략합작(全天候战略合作) 동반자 관계’라는 다종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⁸⁹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지리적 친소관계에 따라 실제로 가변적인 상호관계를 구축하였던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2005년 후진타오 정권이 주창한 ‘조화세계(和諧世界)’ 개념에는 자율적 국제관계에 대한 중국의 희망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조화세계가 ‘조화사회’를 대외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라는 사실은 개인 간 관계 규범을 국가 간 관계 규범으로 확장시켰던 중국적 세계질서와의 논리적인 유사성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조화세계 개념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① 각국의 고유한 제도 및 발전 방식에 대한 존중, ②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대한 반대, 그리고 ③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2009), pp. 163-168 참조.

89 “遍布全球的中国 ‘伙伴关系’,” 『新京报』 2013년 6월 6일, <http://www.bjnews.com.cn/news/2013/06/06/267213.html>; “媒体盘点中国在全世界58个伙伴-详解伙伴关系,” 『新华网』 2014년 7월 25일, http://www.zj.xinhuanet.com/newscenter/InAndAbroad/2014-07/25/c_1111796932.htm, (검색일: 2014. 9. 25).

문제해결 및 공동번영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적 세계질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⁹⁰ 아울러, '공자학원' 등을 통해 유교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연성권력 전략은 보다 명확하게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 전략과 연결된다.⁹¹ 특히, 무력이 아니라 '매력'을 발산해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적으로는 주변국의 자발적 대중국 편승을 기획한다는 측면에서 왕도정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물론, 현 중국이 조화세계를 주창한다는 것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힘에 기초한 문제해결 방식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푸코가 강조하듯, 권력의 통치 전략 변화가 칼로 상징되는 주권·사법 권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치 전략의 세련화라는 맥락 속에서 그러한 주권·사법 권력은 오히려 "침예화"될 뿐이기 때문이다.⁹² 전한기 염철회의 이후 정립된 통치 전략이 유가와 법가의 절충적 성격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다면, 현 중국 역시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힘을 동원한 문제해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2011년 국무원 백서를 통해 향후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不爭霸)' '평화적인 발전(和平發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주권 및 안전', '영토보존', '국가통일', '정치제도 및 사회 안정', 그리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였다.⁹³ 결국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이익의 침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국 통치권력의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화평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와 핵심이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시진핑의 최근 발언 역시 이를 시사

90 "和谐世界理念," 『中国共产党新闻网』 2008年 9月 26日, <http://cpc.people.com.cn/GB/134999/135000/8109699.html> (검색일: 2014. 9. 25).

91 隋萌萌, "中国软实力崛起 孔子学院表现可圈可点," 『中国社会科学网』, 2014年 9月 28日, http://www.cssn.cn/yyx/yyx_yyshdt/201409/t20140929_1346757.shtml (검색일: 2014. 9. 30).

92 미셸 푸코 (2011), p. 161.

93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全文)," 『人民网』, 2011年9月6日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15600336.html>) (검색일: 2014.8.15)

한다.⁹⁴ 실제로 중국은 이미 타이완 문제와 같이 영토주권 및 국가통일이라는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행태를 ‘방어적’ 행동이라고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으로써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현 외교노선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論語』

『大學·中庸』

『孟子』

『宣祖修正實錄』

『仁祖實錄』

『皇明祖訓』

『興宣大院君史料彙編』 석파학술연구원 편. 서울: 현음사, 2005.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6권 (2008).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서울: 혜안, 2007.

김미영. “성리학에서 공적 ‘합리성’의 연원—군자/ 소인 담론을 중심으로.” 『哲學』 제76집 (2003).

김상준.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서울: 글항아리, 2014.

김성배. “청대 한국의 유교적 대중전략과 현재적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7집 5호 (2013).

김영준. “조선왕조 초기 공론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간쟁, 공론, 공론수렴제도의 개념과 종류, 특성.” 『언론과학연구』 2권 3호 (2002).

김한규. 『천하국가』 서울: 소나무, 2005.

94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新华网』, 2014年11月29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11/29/c_1113457723.htm) (검색일: 2014. 12. 1)

- _____.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정두희 이경순 편, 『임진왜란—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문성훈,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 서울: 길, 2010.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 _____. 오트르망 역,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2012.
- 박상섭, 『국가, 주권』 서울: 소화, 2009.
- 박원재, “인지상정의 윤리학: 유교적 규범론의 재음미.” 한형조 외,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서울: 한국국학진흥원, 2013.
-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제 50집 4호 (2010).
-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자유주의와 권력』 서울: 후마니타스, 2014.
- 심승우, “다문화주의와 유교적 통치성의 현대화.” 『한국학연구』 32 (2010).
-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 『아시아는 세계다』 서울: 글항아리, 2011.
- 유미림, “조선 후기의 對중국인식: 송명과 반청, 그 이념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4호 (2001).
- 이문수, “통치(Government), 통치성(Governmentality),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 (2009).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서울: 한길사, 2009.
- 이상익, “유교의 忠恕論과 自由主義.” 『철학』 80권 (2004).
- 전병련, “다산의 중용이해와 신독군자론(慎獨君子論)─「중용자잠(中庸自箴)」과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3권 (1982).
- 조성열, “『논어』, 『맹자』에 나타난 군자/소인, 대인/소인 연구.” 『철학논구』 제34집 (2006).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재조지은’의 형성과 그 의미.” 『동양학』 제29집 (1999).
- 홍성구, “明代 北邊의 互市와 朝貢.” 『중국사연구』 제72집 (2011).
- Acharya, Amitav,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28–3 (Winter 2003/4).
- Burchell, Graham, “Liberal government and techniques of the self,”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and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Chan, Lai-Ha, Pak K. Lee, and Gerald Chan, “China's Vision of Global Governance: A Resurrection of the “Central Kingdom”?” in Mingjiang Li, ed, *China Joins*

- Global Governance*. Lexington Books: Lanham, 2010.
- De Larrinaga, Miguel and Marc G. Doucet. "Introduction: the global governmentalization of security and the securitization of global governance," in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eds. *Securi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Governacne and the State*. New York: Routledge, 2010.
- Dunnell, Ruth W. and James A. Millward. "Introduction," i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London: RoutledgeCurzon, 2004.
- Fairbank, John, 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Foucault, Michel. *Dis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Random House, 1995.
- _____. "Truth and Power,"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a.
- _____. "The Subject and Power,"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b.
- _____. "Technologies of the Self,"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c.
- _____.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New York: Palgrave, 2007.
- _____. "Two Lectures," in Steven C. Roach, ed.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ader*. New York: Routelege, 2008.
- Fletcher, Joseph F. "China and Central Asia, 1368-1884,"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Gordon, Colin.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Greenhalgh, Susan and Edwin A. Winckler. *Governing China's Population: From*

- Leninist to Neoliberal Bio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05.
- Hahm, Chaibong. "Confucian Rituals and the Technology of the Self: A Foucauldian Interpretation," *Philosophy East & West* 51-3 (2001).
- Hevia, James L.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5.
- Jeffreys, Elaine, ed. *China's Governmentalities: Governing Changing, Changing Government*, New York: Routledge, 2009.
- Johnston, Alastir Ian. *Cultural Realism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8.
- Kang, David C.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27-3 (Spring 2003).
- _____.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 Kim, Taeyon. "Neo-Confucian body techniques: women's bodies in Korea's consumer society," *Body & Society* 9-2 (2003).
-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1 (2001)
- Lam, Truong Buu. "Intervention versus Tribute in Sino-Vietnamese Relations, 1788-1790,"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Nadesan, Majia Holmer. *Governmentality, Biopower, and Everyday life*, New York: Routledge, Kindle edition, 2008.
- Oh, Minjoo and Jorge Ardití. "Self-Cultivation as a Microphysics of Reverence: Toward a Foucauldi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Philosophy East & West* 60-1 (2010).
- Rose, Nikolas. "Liberal government and techniques of the self,"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and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The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Rossabi, Morris. "Introduction,"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Wang, Gungwu.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Wang, Yuan-Kuan. *Harmony and War: Confucian Culture and Chinese Power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Yan, Xuetong. "A Comparative Study of Pre-Qin Interstate Political Philosophy." in Daniel A. Bell, ed.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a.
- Yang, Lien-she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遍布全球的中国'伙伴关系'." 『新京报』 2013年 6月 6日. <http://www.bjnews.com.cn/news/2013/06/06/267213.html> (검색일: 2014. 9. 25).
- 陈季冰. "软实力与王道." 『南方都市报』 2009年 1月 21日. <http://chenjibing.blog.sohu.com/108962467.html> (검색일: 2014. 12. 5).
- 陈金霞. "汉武帝《轮台诏》并非罪己诏." 『河南师范大学学报』 第35卷 第6期. 2008年 11月.
- 渡边信一郎 著, 徐冲 译. 『中国古代的王权与天下秩序: 从日中比较史的视野出发』 北京: 中华书局, 2008.
- 干春松. 『重回王道—儒家与世界秩序』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12.
- 高明士. 『天下秩序与文化圈的探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和谐世界理念." 『中国共产党新闻网』 2008年 9月 26日. <http://cpc.people.com.cn/GB/134999/135000/8109699.html> (검색일: 2014. 9. 25).
- 金观涛·刘青峰. 『兴盛与危机: 论中国社会超稳定结构』 北京: 法律出版社, 2011.
- 李泽厚. 『论语今读』 北京: 新华书店, 2008. "媒体盘点中国在全世界58个伙伴-详解伙伴关系." 『新华网』 20年 7月 25日. http://www.zj.xinhuanet.com/newscenter/InAndAbroad/2014-07/25/c_1111796932.htm (검색일: 2014. 9. 25).
- 隋萌萌. "中国软实力崛起 孔子学院表现可圈可点." 『中国社会科学网』 2014年 9月 28日.

http://www.cssn.cn/yyx/yyx_yyshdt/201409/t20140929_1346757.shtml (검색일: 2014. 9. 30).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新華网』 2014年 11月 29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11/29/c_1113457723.htm (검색일: 2014. 12. 1).

王小紅·何新华. 『天下体系：一种建构世界秩序的中国经验』 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4.

王晓波. “对澶渊之盟的重新认识和评价.”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年 第4期

赵纪彬. 『論語新探』 北京：人民出版社，1976.

赵汀阳. 『天下体系：世界制度哲学导论』 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1.

郑永年. 『通往大国之路：中国与世界秩序的重塑』 北京：东方出版社，2011.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全文).” 『人民网』 2011年 9月 6日.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15600336.html> (검색일: 2014. 8. 15).

When Foucault Problematizes the Chinese World Order: The Governmentality of the Chinese World Order

PARK Hongseo |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From *governmentality* perspective suggested by Michel Foucaul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hinese World Order* as a strategy of governing power. Power has two governmental technologies: the technology of domination and self. The former determines the conduct of individuals and submit them to domination; the latter transforms individuals to subjects who govern themselves. Within the same context, the governmentality of the Chinese World Order has not only the technology of domination called *Gimi* (loose rein) policy but also the technology of self by which neighboring countries autonomously make themselves a suitable subject dubbed a country of *Gunja* (a man of noble character) in the Chinese World Order. Given the fact that the Chinese World was an efficient governing strategy, it is possible that current China also takes the governing strategies implemented in the Chinese World Order. As the concept of *Harmonious World* indicates, constructing international relations coordinated by self-restrained individual states can be the core of the strategy.

투고일: 2014년 9월 30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3일